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0. 19.(월) 12:00
(지 면) 2026. 10. 20.(화) 조 간

행정안전부, 삼성·LG와 협력해 재난 피해 가전 무상수리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자연재난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으로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휴대폰 긴급 점검부터 가전 출장·공임비 100% 무상 지원으로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 국내 대표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주), LG전자(주)와 함께 재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피해 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개정 체결한다고 밝혔다.

* (2021. 7. 6.) 재난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업무협약(MOU) 최초 체결

이번 협약 개정은 기후변화와 복합 재난 증가 추세에 발맞춰, 기존 ‘자연재난’에만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대형 산불·화재·폭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공식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가전 2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위한 맞춤형 협력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 지원 대상 재난의 범위를 대폭 확대

기존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가구 중심에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 피해 가구까지 무상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 유형별 맞춤형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 제공

자연재난 시에는 침수 가전제품을, 사회재난 시에는 화재나 산불로 인해 전소·열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특히, 이재민의 생계와 생존 소통에 직결되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의 긴급 점검과 세척을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또한, 모든 가전의 모터·기관 등 핵심부품 교체 시 수리 출장비와 공임(인건비)은 100% 무상 지원하며, 부품비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현장 ‘합동무상수리팀’ 운영 및 신청방법

재난 피해 주민은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현장 ‘합동무상수리팀’ 부스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대형 가전의 경우 ‘개별 수리팀’ 방문 신청을 통해 가정 내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재난 양상이 복합화되면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불과 화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존 가전 분야의 협력 체계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한층 더 다양하게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태석 (044-205-5510)
		담당자	사무관	김순옥 (044-205-5514)

